

화학, 다이옥신 배출 자발적 감축

환경부, 철강·비철금속·시멘트·화학 19사와 POPs 저감 VA 체결

제철·제련소 등의 공장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대표적 발암물질인 다이옥신(Dioxine)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잡았다.

환경부는 7월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용 장관,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김재욱 자원순환연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창오 포스코 사장 등 19개 국내기업 대표들과 <특정 잔류성 오염물질(POPs)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국내기업은 포스코, 현대INI스틸, 동국제강, 창원특수강 등 철강기업, 풍산, 진로산업 등 비철금속기업, 현대시멘트, 쌍용양회, 성신양회 등 시멘트기업,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대한펄프 등 화학·에너지 계열기업 등이다.

국내기업들은 협약식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2008년까지 지금의 70% 수준으로, 2010년까지는 절반 수준으로 각각 줄이기 위해 다이옥신 제거시설 설치, 원료·시설·공정 개선, 배출량 측정결과 매년 환경부 보고를 약속했다.

환경부는 대신 다이옥신 제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배출량을 줄이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다이옥신 등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이옥신은 스톡홀름 국제협약이 정한 12가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중 하나로 청산가리의 1만배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에 포함돼 기형아 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량은 2001년 기준 820g으로 추정되며 83%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17%는 비소각산업 분야에서 배출됐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량은 일본의 2001년 배출량(1886g)의 43% 수준이지만 일본은 강력한 규제로 2003년에는 배출량을 375g으로 크게 줄였다.

국내에서도 1997년부터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철강 등 288개 주요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다이옥신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7/18>